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신당창당 대비

신당창당기획단장 김정진 이번주부터 지역별 간담회 첫 일정은 광주 가능성 합당지지운동 합법적으로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가 신당창당을 위한 기획단을 꾸리는 등 본격 준비에 나섰다. 창당기획단장은 김정진 의원이 맡고 매주부터는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한다. 첫 일정은 광주에서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지난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521담화실에서 회의를 연 뒤 안철수 대표와 통합 찬성 측 행보에 대한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운동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지지와 신당창당) 부트렉 전략을 세분화해서 토론했다"며 "신당창당 추진 전략에 대해서는 체계를 갖추고자 전략기획위원회와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김정진 의원이 창당기획단장을 맡고 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홍승태, 김정기, 이연기"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다음주에 지역별 당원(민사회)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첫 일정은 광주가 되지 않을까"고 부연했다.

그는 합당지지운동과 관련해서는 "안건 상정 의결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적극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반드시 전당대회를 저지하겠다는 결심을 세웠다"며 "의원들이 특별히 결의한



대한민국 헌정회 신년 인사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신년인사회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맨 왼쪽), 심재철 국회 부의장, 유용태 헌정회장 등과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것은 이번 전대가 용광이 전대가 패선 안 된다. 이를 유념해야 한다"는 결의를 했다.

최 의원은 또 "운동본부 사무총장은 현역의원 중 새로 맡을 분을 모색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관계로 협의가 안돼서 다음에 발표하겠다"며 "앞으로 통합추진에 대해서 많이 의의해하고 당황해하는 청년들, 실버어르신들 여성 등 별도의 참여방

식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신당창당 추진에 동의한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운동본부 대표인 조배숙 의원, 김종희·박주현·박준영·박지원·유승업·윤영일·이상돈·장정숙·정동영·최경환 의원 등이다.

최 의원은 반대파 18명 중 비례대표 의

원의 경우 출당이 안 된다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인 20명을 채우기 어렵지 않다는 지적에는 "숫자에 개의치 않는다. 우리가 추진하는 가치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라며 "지금 중재와 의원들의 전제가 통합 반대파 통합 추진을 해갈 때 그분들의 선택은 명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스시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안 대표, 보수야합으로 배신"

난이 현란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두 당의 아합에 개혁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을 가져다붙이는 뻔뻔함에 실소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MR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전 정권에 대한 복수라 비난하고, 정부의 복에 대

한 대화제를 구걸이라고 막말하는 안 대표는 감히 개혁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다. 반개혁적 안철수 당과 반평화적 유승민 당의 조합은 결국 보수야합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본부는 개혁신당 창당의

계획을 밝혔다. 지난 대선패배 이후 반개혁세력의 대변자로 전락한 안 대표는 더 이상 개혁정당 운운하며 국민을 혼동시키고 우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보수 우경화 야합의 본색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광장의 촛불 민심과 호남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는가"고 강조했다.

/뉴스시

정세균 "개헌 성사 가능성 최고조... 성공률 51%"

"국민 70~80% · 국회의원 90% 이상 · 대통령이 개헌에 찬성... 수직적 분권 이뤄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조기 개헌의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민과 국회, 대통령 모두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70~80%, 국회의원 9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만큼 개헌 성공률

은 51%"라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서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는 "여러 정당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수평적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수직적 분권이 이뤄진다면 중임제는 단임제든 어떤 형태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현행 선거구제는 양당구조를 고착화하기 때문에 민의가 선거에 반영되는 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전략 준비를"

정동영, 남북통일축구대회·농구 교류 등 제안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전략 준비를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전략 준비해야'라는 글을 올리고 "평창올림픽이 선물한 한반도 평화는 일시적이므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부터 평창올림픽 이후 일정 계획과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스포츠교류를 지속해나가는 방안으로 2006년을 끝으로 중단된 남북통일축구대회 재개추진과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하는 농구 교류 추진을 제안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시, 금광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한 교류를 지속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 의원은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1992년 팀스포팅 훈련 중단과 북한의 IAEA 사찰 수용 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전점이 미려했지만, 92년 9월 충격적인 대통령 훈령 조작사건과 갑작스러운 팀스포팅 훈련 재개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은 경험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6자회담 당사국인 미중일과 긴밀히 공조하고, 상호신뢰를 훼손하는 위기를 막는 평화의 로드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野 UAE 운영위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야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에 대해 "국익과 관련된 일로 국가 간에 풀어야 할 문제"라며 "상대국이 문제 삼지 않은 일이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하는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 운영위 소집을 위한 협의 요청을 해온 바 없다"며 "협의 요청을 해오더라도 정치공예에는 응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대신 일방적인 운영을 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UAE 의혹 해소 위해 운영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인 만큼 한국당이 일방적인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나해 합의 여부 준수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뉴스시

민주당, 가짜뉴스 유포자 檢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개헌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14명의 유포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가짜뉴스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라는 제목의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면서 "당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용을 보면 '음면양면으로 인민위원회를 설치한다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려고 한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시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